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월 11일 수요일 (음 12월 14일) 제172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7년은 전주 원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를 중심으로 전주가 로마와 파리를 뛰어넘는 위대한 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top3 문화도시로 키울 것”

김승수 전주시장이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원도심 100만평(약 330만㎡)을 아시아의 문화심장터로 키워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12면>

김 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전주는 국제슬로시티 확대·재인증, 톤리 플래닛 아시아 3대 관광명소 선정 등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도시로 인정받았다”면서 “2017년은 전주 원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를 중심으로 전주가 로마와 파리를 뛰어넘는 위대한 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 Top 3 문화도시 도약 △전주형 사람의 경제 구축 △사람중심 복지정책 확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원도심을 근간으로 한 아시아 문화심장터 조성과 중소기업 글로벌 프로젝트, 서민 주거·금융복지 실현, 걷고 싶은 도시 등 20개 핵심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시아 Top3 문화도시로 도약을 위해 전주 원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전정부성 일원에 대한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또, 전라감영 재창조,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

▶ 김승수 시장 신년 기자회견

전주부성 일원 보전·관리
전라감영 재창조 추진
한지 등 전통문화 원류 복원

벨트 조성, 성매매 집결지(선미촌) 문화재생, 서학동예술촌 마을재생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들 사업을 상호 연계시켜 원도심 권역을 한옥마을과 같은 문화관광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전주 전통한지 원류복원과 견훤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세계무형유산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의 원형·원류를 복원하고, 독창적 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주형 핸드메이드 시티 조성도 본격 추진된다.

시는 오는 5월 개막하는 U-20월드컵은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성공리에 치러낼 계획이다.

경관농업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항공대대 이전과 (가칭)도도 캐슬 프로젝트 추진, 팔복·승암 새마을을 조성, 전주교도소와 법원·검찰청 이전부지 재생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조적인 도시 공간을 재창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산업시설인 팔복동 소재 공장을 활용한 팔복예술공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급속한 생태하천 복원, 팔복동 철길 명소화 등 팔복동 공

간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전주생태동물원과 덕진공원, 아중호수 생태공원 등 생태를 살리고 문화를 접목하는 재생사업도 속도를 내는 등 문화예술재생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시는 또 전주형 사람의 경제 구축을 위해 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경제와 기업경제, 사회적경제, 성장동력산업 등을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한옥마을의 콘텐츠 및 정체성을 강화하고,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 등 음식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관광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글로벌 프로젝트로 해외수출 지원, 기 살리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와 전북 창업보육센터 건립 등 지역의 미래인 청년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의 미래 먹거리인 탄소와 3D프린팅, 드론, ICT, 사물인터넷(IOT) 등 5대 신성장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사회경제적 아카이브 구축과 전주형 화교협동조합 설립 지원 강화 등 사회적 경제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사람중심의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동네복지 시범동을 20개동으로 확대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전주형 복지재단인 '전주시립'도 시의회 등의 등 관련절차를 밟아 설립할 계획이다.

아동친화 도시 조성과 장애인들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로 만들고, 전주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등 전주형 주거복지 모델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강화 등 시민들의 금융복지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도로관리 12원칙을 제정·시행해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확대 등을 통해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어 차에게 빼앗긴 도로를 시민들에게 점진적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또, 신도시 개발지구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등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힘쓰기로 했다.

시는 오는 2월 시행되는 60년 만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통해 버스타기 편한 도시를 만들고, 시설이 낙후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전주역사는 한옥형으로 전면개선을 추진하는 등 전주의 첫 인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의 숲을 잇고 하천을 살리며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전주 온통 숲 프로젝트, 삼천·전주천 등 생태하천 조성,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확대 등도 전개된다. /김영재 기자

**전북도 팀장급 인사
홈페이지(www.jjmaeil.com) 참조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낮춰야”

김승환 교육감, “9급 공무원 되어 공무 수행 가능 연령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에 따라 참정권 제한은 안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선거권 연령과 관련해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맞다고 최근 밝혔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목적으로 시작한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9급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다. 또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연령이 17세다”라면서 “만 18세에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것과 투표장에 나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를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 연령으로 18세를 주장하는데 그 근거를 꼽는다면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고 설

명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에는 아동(Child)의 개념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8세부터는 성인으로 보고 참정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

김 교육감은 “일부에서 선거권 연령을 17세, 16세로 주장하기도 한다. 유럽에서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16세까지 내리고 있다”면서 일단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 뒤 점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희생 학생과 교사, 일반 승객, 미수습자,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뒤 강화된 세월호 특조법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해은 기자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용납 못할 비민주적 행위”

“정부, 지원 신청할때마다 선정되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집행을 비민주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에 한법 위반 내용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이란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신청 시마다 선정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법 위반 내용이 적시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관련된 모든 부분이 망라돼 있다. 한법 위반 내용도 적시돼 있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대상 선정과정 등에서

활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 김 전 문체부 장관, 김성률(57) 전 교육문화수석, 정관우(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현재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부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교육문화수석실로 전달된 뒤 문체부에서 실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남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 전 장관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예정된 만큼 구속 여부를 확인한 뒤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장관에 대한 소환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